



“금속노조 선봉에서 초기업·원청교섭 열어낸다”

금속노조, 15일 1차 파업 돌입... ‘초기업·원청교섭, AI 도입 시 고용 및 인권 보호, 금속산업 최저임금’ 등 요구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모든 노동자의 고용보장과 초기업·원청교섭 쟁취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등 금속노동자 7만 9천 명이 15일 1차 파업 투쟁에 나섰다. 교육, 총회 시간으로 투쟁에 결합한 6천여 명을 포함하면 총 8만 5천여 명이 일손을 놓았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 부산 등 전국 11곳에서 파업 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이번 1차 파업 요구로 ▲모든 노동자의 고용보장 ▲초기업·원청교섭 쟁취 ▲AI 도입 시 고용 및 인권 보호 ▲기본급 인상(149,600원) ▲금속산업 최저임금(시급 11,540원·월급 2,608,040원) ▲정년연장 ▲신규채용 등을 내걸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자본은 생산 기반

을 해외로 빼돌리고 인공지능(AI) 자동화에 투자한다며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위기를 노동자가 막지 않으면 누가 막을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마다 정년퇴직을 하는 수천 명의 조합원들은 국민연금 수급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정부의 대책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상만 위원장은 “원청교섭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면서 노동부 시행령을 끼워 넣어 교섭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2011년도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창구단일화라는 독소조항을 끼워 넣어 대한민국은 노조하기 정말 힘든 나라가 됐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미명 하에 노조 조직률이 채 10%가 안 되는 나라가 된 것은 정부와 자본이 결탁해서 노조를 탄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상만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올해 초기업·원청교섭에 명운을 걸었다“며 “금속노조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진짜 사장과 교섭 열어내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에 앞장서겠다“고 결의했다. 이어 “1차 파업에서 원청교섭이 뚫리지 않는다면 8.26 파업에 더 많은 동지들과 더욱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 또 전진하자“라고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이날 1차 파업에는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등 민주노총 다른 산별·연맹 조합원들도 동참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서울 집회에서 “노동자에게만 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모였다”며 “진짜 사장인 원청을 교섭장에 앉히고, 사업장의 울타리를 넘어 초기업 교섭을 반드시 쟁취하고자 나왔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영웅이라 추켜세우며 허리를 굽힌 이재용과 최태원의 재산이 불과 세 달 동안 37조 원이 불어났다”며 “이 엄청난 부의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양경수 위원장은 정부의 책임있는 원청교섭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대통령이 머리를 숙여야 할 진짜 영웅은 저임금·고강도 노동에도 묵묵히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원청교섭을 회피하는 사용자를 처벌하고 정부부터 원청교섭을 이행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정부와 자본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 26일 예정 2차 파업을 비롯해 3차 파업도 단행하며 투쟁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조선업 첫 노사정 협의체 출범, 머리 맞댄 노사정이 나아가야 할 길 K-조선의 지속가능한 미래, 현장 목소리에 답이 있다·타업종 대화도 물꼬 터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조선업 첫 노사정 협의체가 닳을 올렸다.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은 1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발족식에 이어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첫 회의가 연달아 개최되며 본격적인 협의체 활동에 들어갔다.

협의체 발족식에는 금속노조, 조선노연(조선업 종노조연대),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 노동대표들과 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주요 조선

사(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사측 인사들이 참여했다.

아울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정부 측과 노사정이 추천한 조선업 전문가 등 20여 명의 운영·실무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비례)도 참석해 협의체 출범에 힘을 보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의 경쟁력은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손끝에서부터 시작된다” 라며, “그 손끝에 정당한 보상과 안전,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려야 한다. 공정한 분배가 숙련공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확실한 재투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기업의 단기 이익을 넘어 조선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일, 그것이 우리 협의체가 나아가야 할 길” 이라고 강조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자동차, 조선, 철강,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많은 업종 분과위원회가 조선이다. 오늘 노사정 협의체 발족을 통해서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에 노사정 협의체가 기여하기를 바란다” 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의 의견 반영이 필수다. 이번 노사정 협의가 이것의 시작이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박상만 위원장은 “조선업은 숙련된 우리 조선소 노동자의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발전해왔다” 는 사실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불황기 대비 노동자 생계 유지 지원책, 청년 노동자 육성책, 고숙련 노동자 보호책 등이 필요하다. 우리 조선업에 늘고 있는 방위산업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정책도 필요하다. 급증하는 이주 노동자 고용이 정규직 채용 회피 및 저임금 확대로 악용되지 않도록 강제하는 정책도 시급하다. 기업주들이 반대만 일삼거나 이를 정부가 조율·조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조합은 투쟁을 택할 수밖에 없다” 라고 현장의 의제를 언급했다.

이상균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은 “노사정 협의체는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현장 노동자의 안전 확보, 숙련 인력 확보,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조선업 생태계의 현안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화의 창구가 될 것” 이라며, “조선업 생태계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미래를 논의하는 이 자리가 상생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과 협력이 필수적” 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여 상시 대화하는 업종 차원의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체는 노사정 대표급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나뉘어 운영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조선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쌓여 있는 의제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협의체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운영협의체에서는 큰 틀에서의 협의체 운영 방향을 공유했고, 이어진 실무협의체에서는 향후 운영계획과 논의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실무협의체는 앞으로 노사정이 고민하는 의제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조선업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상설 대화 기구로 운영된다.

올해 업종별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 금속노조는 조선업을 시작으로 다른 업종까지 노사정 대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 금속노조의 자동차업종, 철강업종, 전기전자업종 노동자가 대정부 요구를 전달한 바 있다.